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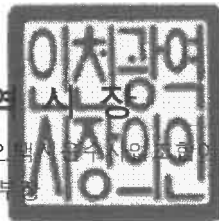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인천시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계획 알림

1. 귀 조합(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 경제정책과-2601(2023.2.17.)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가파른 고물가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앙·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3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회의」(행정안전부 주재, '23.2.7.),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대통령 주재, '23.2.15.), 「제3차 수도권3자 협의체회의」(서울·인천·경기 단체장 주관, '23.2.17.)가 연이어 개최되었으며, 지난 2월15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주재, 관계부처 장관 참석)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초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하반기에 인상하는 것으로 시행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4. 인천시도 공공요금 안정화 정책검토회의('23.2.16.) 및 공공요금 인상 상반기 동결(인천시장, '23.2.17.)에 따라, 인천시 택시요금 인상의 상반기 동결이 결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이는 시에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해 그 동안 추진되었던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인상 시기만 조정되는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금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은 도시가스, 택시, 버스,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봉투 등 7대 분야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어려운 서민경제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전 국민 고통 분담 차원으로 택시 업계에서도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

인천광역시



수신자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이사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의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장

주무관

이원희

택시정책팀장

오윤주

택시운수과장

전결 2023. 2. 20.

윤병철

협조자

시행 택시운수과-1268

(2023.02.20)

접수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1층 (구월동) / <http://www.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3803

팩스번호 032-440-8669

/ wonnie202@korea.kr

/ 비공개(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한국노총 3층 / ☎ (032)438-214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80 / ☎ (032) 524-8507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718번길 33 / ☎ (032) 578-543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66번길 22 / ☎ (032) 466-5101~4

성명서

택시가족에 대한 희생 강요!

인천시는 택시요금 현실화 즉각 시행하라!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매년 급등하는 운송원가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결과 열악한 처우에 놓인 택시운전자들의 이탈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인 우리 택시가족에게 돌아왔다.

실효성 있는 택시문제 해결방안 택시요금 현실화 즉각 시행하라!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물가상승 지속에 따른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물가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택시, 버스요금을 포함한 7개 항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적극 추진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이후 지난 몇 년간 우리 택시업계는 누적된 영업 손실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운송원가의 상승, 기사 수급난 등 영업환경의 악화로 운송수입의 급감이 지속되면서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한 택시사업자의 휴·폐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수익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년 들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서울과 대구, 울산의 택시요금이 현실화되었고 우리 인천의 경우에도 현재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목전에 두는 등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제동이 걸림으로써 자칫 고사위기에 처한 업계 내부에서는 항의집회를 요구하는 등 대규모 시위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업계의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준공영제인 대중교통과는 달리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택시사업자의 경우 줄도산하는 사태가 현실화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택시 수급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하여 승차난을 가중시킴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인천 시민의 이동편의를 크게 저하시킬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요금의 경우에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평가항목에서 제외” 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인천시는 즉시 인천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 택시요금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실효성 있는 택시문제 해결방안 택시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현실화 즉각 시행하라!

또한, 높은 노동강도와 취객들의 폭언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심야 할증시간 4시간 운행에 현재와 같이 시간당 1만원의 수입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택시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최소한 시간당 2만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것만이 택시 운행률을 높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과 할증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가안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고 손바닥 뒤집듯 관련 정책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인천시 또한 택시업계의 누적된 경영적자와 승객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수년째 미뤄온 택시요금 조정을 또다시 유보하려 하고 있다.

인천시는 택시요금 현실화 즉각 시행하라!

현재의 택시문제는 비단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수도권 등 대도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실성 없이 물가안정이라는 명분만 쫓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적인 택시정책으로 인한 현재의 택시문제는 앞으로 닥칠 더 큰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경고일 뿐이다.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우리 택시업계에 또 다시 택시요금을 동결한 채 택시가족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우리 인천지역 택시가족은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답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3. 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인천본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인천본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